



땅 끝 해 남 소 식

2019년 4월 15일(제448호)

HAENAM NEWS

◆ 군정목표 ◆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

◇ 군정방침 ◇

현장중심 소통행정
살기좋은 부자농촌
체류하는 문화관광
생동하는 지역경제
감동주는 맞춤복지

발행인: 해남군수 발행처: 기획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표전화 061)530-5462 팩스 530-5574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공고·고시·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공 고

◎ 해남군공고제2019-0760호 ----- 1

고 시

◎ 해남군고시제2019-0045호 ----- 3

◎ 해남군고시제2019-0046호 ----- 4

과
이

해남군공고 제2019 - 760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신규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 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 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해 남 군 수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신규등록 내역

등 록 년월일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등록 번호	비고
2019.4.4.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남해남2019-29-**)	주식회사 가온토건	이*자	전남 해남군 해남읍 명량로 ****	201411- 00*****	신규 등록 (업종 추가)

끝.

고 시

해남군 고시 제2019 -45 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해 남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내용

저수지명	위 치	규모				관리자	해제 사유	비고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수해면적 (ha)			
가성제	해남군 옥천면 가성리 871-2번지 일원	18	72	4.5	5.2	해남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금산제	해남군 삼산면 창리 415-1번지 일원	35	128	6.6	11.5			
내동제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248번지 일원	31.8	136	7.6	14.2			
중리1제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24번지 일원	18	117	9	12			
황죽1제	해남군 계곡면 황죽리 195번지 일원	46	175	4.6	15.5			

2. 저수지 관리기관 : 전라남도 해남군(건설주택과 ☎ 061-530-5468)

해남군 고시 제2019 -46 호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 고시(안)

□ 관련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6조, 해남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9조

□ 제정이유(활용)

세무공무원의 범칙사건 및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를 전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의무 및 역할 강조(지방세기본법 § 76, ‘18.12.24.)
 -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반영(지방세기본법 § 82, ‘11.1.1.)
 -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야함을 명시
-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반영(지방세기본법 § 83, ‘11.1.1.)
 - 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 세무조사 기간의 반영(지방세기본법 § 84, ‘11.1.1.)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붙임 해남군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1부.

해남군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